

06 _ 대학, 이렇게 달라진다

대학 연구환경 바꿔 교육의 질 높인다

글 | 민동필 _ 한국학술진흥재단 본부장 dpm@krf.or.kr

대학의 설립목적이며 사명은 교육과 연구이다.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는 연구해야 하고, 가장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위해서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기획하게 된다. 그러나 교수는 교육을 제일의 목표로 삼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연구에 더 몰두한다. 교수가 연구에 더 흥미를 가지거나, 그것에 대한 보상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연구를 통해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교수의 제자들은 그 만큼 더 많은 이점을 가진 교육을 받는 것이기에 교수가 연구에 몰두하는 것을 더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교수가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 그 만큼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 연구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구성하는 첫단추인 셈이다.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비의 확보다. 연구비 확보는 경쟁을 뜻하고, 경쟁을 통해서 좋은 질의 연구가 선택된다. 모든 제도의 근본은 제일 좋은 순으로 연구과제가 선택되고, 가장 적당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연구비가 얼마인지를 판정하는 데는 경쟁이 있을 수 없다.

교수들의 연구는 개개인의 능력과 호기심에 따라 진행되고, 그 연구를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대부분 교수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교수의 도덕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정된 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책임은 교수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기초연구’ 부문 정부지원 더 늘려야

지난해에 연구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고발이 적지 않게 벌어졌다. 때문에 연구비의 적정성이나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혹을 샀다. 아무리 연구비를 늘리고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해이한 교수에게 지원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즉 좋은 과제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비를 집행하는 최종 책임자인 교수의 도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는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 이런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제도를 보존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덕성 위에서만이 좋은 제도가 구축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의식의 기초인 도덕성이고, 그 위에 연구에 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것이다.

연구활동을 크게 나누어 보면 산업체와 직결되어 개발과정을 담당하는 연구, 즉 ‘개발연구’가 있고, 개발 단계에 도달하기 전이지만 적어도 주어진 목표를 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단계의 연구, 즉 ‘응용연구’가 있는가 하면,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하는 의혹을 풀기 위한 연구, 즉 ‘기초연구’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이미 2004년말에 정부는 각 부서가 맡을 주된 업무를 정의하고 사업을 재정돈하기로 했다. 그래서 ‘개발연구’는 산업자원부가, ‘응용연구’는 과학기술부가, ‘기초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서가 되고, 연착륙을 위해서 2005년을 과도기적인 운영의 해로 정한바 있다. 모든 유형의 연구가 대학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수는 기초연구에 속하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

연구를 학술적인 연구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연구비의 규모를 보면, 개발연구에는 그 경제적인 효과로 인해서 넉넉하게 예산이 배정되는 반면, '기초연구'는 언제나 아주 적은 예산이 배정된다. '기초연구' 부분을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술연구조성비는 3천억 원 정도다. 그 중 정작 대학의 교수들에게 연구과제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되는 예산은 약 2천억 원 규모다. 국내에 7만 명 정도의 연구할 수 있는 교수가 있다고 하면 1인당 300만 원 정도의 연구비가 배분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비는 한 과제당 약 2천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체의 약 1/7 정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가 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교수들은 선택된 사람들인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수의 연구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그래야 사회가 교수들에게 "연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연구하려고 해도 1/7의 비율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연구를 잘 할 수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수들이 생기기 마련이며,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 외국사례에서 흔히 보듯이 정부는 '기초연구'에 더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술연구조성비의 집행기관으로 학술진흥재단을 지정하고 있다. 학술진흥재단은 연구심사과정과 연구진행과



정,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한 심사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이르는 전과정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제도수립과 운영방침은 대학의 연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최적의 연구환경 조성에 대학이 앞장서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대학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연구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첫째, 연구지원환경이다. 연구 주변 환경은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연적인 것이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연구에 있어서 연구지원 환경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적절한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치 먹을 쌀도 없는데 어떻게 다음 해에 뿌릴 씨앗을 확보하지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 연구환경이라 함은 사무요원, 기구관리, 수선 및 제작을 담당하는 인력 및 시약이나 재료 등 모든 부대요인을 포함한다. 이런 요소는 결국 교수들이 연구에 더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에 소위 간접비를 주어 대학의 기반 시설을 갖추게 해야 한다. 새해에는 이러한 환경구축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들 수 있다. 연구비를 신청하기 위한 행정서류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연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충실하게 구축되어서 모든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면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의 확보이다. 대학원 학생은 교수의 연구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학생은 연구를 도우면서 배운다. 그래서 연구과제에 지도하는 학생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과제의 가치는 반감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확보된 학생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확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신뢰 있는 제도이다. 연구과제가 선정된 이상 그 연구의 주체인 교수가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더 자유스러운 연구활동이 더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단지 부도덕한 연구비 집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 때문에 제도 자체를 더 엄격하게 한다면 퇴



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장기과제의 운영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 질 높은 연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연구자들에게 장기적인 기회에 의한 연구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연구는 연속적인 행위이며, 오랜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만 가치 있는 업적이 나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연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낮은 선정률 위에서는 장기간 연구비를 보장해 주다 보면 새로 진입하는 연구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전체 선정률을 50% 정도로 올리면서 그 중에 반정도를 장기과제로 운영할 만한 예산 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과제 선정과 심사 과정 세분화·전문화

2006년에는 연구과제 선정과정이 바뀐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좀 더 세분화된 연구분야에 맞추어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패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심사패널을 주재하고 그 심사내용에 대한 대외적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프로그램 경영자의 수가 현재보다 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결국 좀 더 세분된 전공자에 의한 심사로 전공에 대한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선정심사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그 결과는 무엇보다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는 그 관련분야가 인정하는 인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의 심사과정은 학술진흥재단에 대학에서 파견 나와 있는 교수들(전문위원)에 의해서 감시될 것이다.

연구과제 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변화하게 된다. 이 위원들은 우선 충분한 경력의 소유자이며 학계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은 인사로 이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학문적인 존경심이 없다면 그 결정에 대한 승복은 어려울 것이다. 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학문적인 수월성에 의해 과제를 선정할 것을 서약하게 된다.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는 여러 종류의 사업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약 2천억 원 정도의 연구비는 '우수연구지원사업'으로, 그리고 약 1천억 원에 대한 연구비는 '학술기반구축사업' 또는 '특정목적용 가진 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된다. 2005년에서부터 과학기술부와의 업무조정에 의해 약 1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공계 사업이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어 왔고, 2006년부터는 완전히 학술진흥재단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지원과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지원을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심사과정이나 선정과정이 독자적인 특성을 살려서 운영된다.

특히 학술진흥재단은 연구자의 생애 각 시점에 맞는 프로그램 모두를 개발하여, 박사후 연구원, 젊은 연구자 및 강사나 연구교수 과정, 조교수 과정이나 완숙한 연구자로서의 활동 등 전체 생애의 각 시점에 필요한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2006년부터는 젊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분류로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심사과정과 연구비 분배를 그들에게 더욱 적합한 조건에서 심사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변화요인은 대학을 좀 더 본연의 연구기관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연구가 교육으로 확산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㉓



글쓴이는 한국물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